

일본의 북극 정책 방향 - OPRF 북극 제언을 중심으로 -

† 김 경 신

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

요 약 : 올 3월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(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: OPRF)이 북극에 관한 추진 시책을 발표했다. 국제법, 안전보장, 과학조사, 조선, 해운, 기상관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'일본 북극해 회의'가 지난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일본 정부가 북극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. 이번 보고서는 행정조직·선박 및 항로·지구환경·안전보장·자원개발·국제물류·국제협력 등 북극 전반을 다룬 일본의 종합적인 정책으로,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극해를 전담할 전담조직 신설, 새로운 해상방위 대책 수립,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.

핵심용어 : 일본의 북극 정책, 해양정책연구재단, 종합해양정책본부, 시라세

일본의 북극 정책 방향
- OPRF 북극 제언을 중심으로 -

김 경 신
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2012. 10.

1. OPRF 북극 정책 수립 과정

▶ **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(OPRF) 북극에 관한 정책 제언 발표**
※ OPRF(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)은 해양정책을 연구하는 기관, 2007년 일본 해양기본법 제정에 기여

Content

- 1 OPRF의 북극 정책 개요
- 2 OPRF의 북극 정책 및 전략 방향
- 3 OPRF의 북극 정책 주요 내용
- 4 정책 시사점

1. OPRF 북극 정책 수립 과정

▶ **지난 2년 동안 북극해 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북극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**

- 북극해 회의는 국제법·지구과학 등 산·학·연 전문가 12인으로 구성, 올 3월 보고서를 완료하고 5월에 공개
-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 도출

회 의	주 제
1차(2010. 7)	국제법 질서, 해양 거버넌스
2차(2010. 10)	항로, 조선
3차(2010. 12)	국제 심포지움 : 북극해에 관한 자원 개발
4차(2011. 7)	북극해, 지구 환경 문제 및 일본 주변해역에 관하여
5차(2011. 9)	북극해역이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연안국과 일본에 관하여
6차(2011. 11)	북극해 통항 항로 개설 후 동아시아권 국제 물류
7차(2012. 3)	일본 북극해 보고서(안)과 정책 제언(안)

† 교신저자 kskim@kmi.re.kr

2. OPRF 북극 정책 제언의 배경과 특징

▶ 이전 INSROP(1993~1999), JANSROP II (2002~2006)은 항로 개발과 항해 시뮬레이션, 이를 위한 과학조사 성격 프로젝트

- ※ INSROP : International Northern Sea Route Programme
- ※ JANSROP : Japan Northern Sea Route Programme

▶ 이번 보고서는 일본 북극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전략

- 행정조직 · 선박 및 항로 · 지구환경 · 안전보장 · 자원개발·국제물류·국제협력 등 북극 문제 전반에 관한 일본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
- 북극 항로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 관할 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와 안전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
- 일본에 비해 앞서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비 북극권 국가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

2 OPRF의 북극 정책 및 전략의 방향



3 OPRF의 북극 정책 주요 내용

1. 9가지 북극 정책 제언(①~②)

▶ 북극해 정책 사령탑 설치

- 종합 해양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해양정책본부 내 전담 부서 설치
- 전담 조직을 통해 북극해 종합 정책과 전략 수립

▶ 북극 관리에 충실

- 현재 북극이사회 임시 옵서버 자격으로는 한계, 정식 옵서버 자격 획득
- 북극 연안국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한 채빙 관측선 공동 이용

※ 북극이사회(Arctic Council)는 1996년 북극해 주변국가들로 구성된 기구임. 지속 가능한 개발, 북극 해양 환경 보호, 북극 모니터링 및 평가 등 6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음. 한국·중국·일본·이탈리아 등은 임시 옵서버 상태에 있음.



1. 9가지 북극 정책 제언(③~④)

▶ 북극해 환경문제에 적극적 대응

- 북극해 환경보호조약의 수립 추진
- 항로의 상업화에 따른 일본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대책 수립

▶ 북극해 자원 대처 강화

- 북극해 자원 개발과 에너지 수송에 대한 대책 마련
- 자원 개발에 관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인지도 제고 정책 수립

12

2. 9가지 북극 정책 제언(⑧~⑨)

▶ 국제질서 형성에 공헌

- 북극해 문제는 전 인류에 관한 문제로서 국제법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일본이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

▶ 일·러 간 대화 창설

- 북극해 문제에 관해 종합적인 관점으로 정책과 전략을 수립
- 정부 고위급이 참여하는 민간 공동 일·러 북극해 회의 정기적 개최

13

2. 9가지 북극 정책 제언(⑤)

▶ 북극해 조사·연구 충실

- 국립극지연구소를 북극해 중추 기관으로 육성, 국제협력 참가 기능 부여
- 남극 관측선인 '시라세'를 북극 국제 협력 연구에 활용
- 러시아와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 수행



구분	Shirase	Araon	Xuelong	계급	국립극지연구소
연도	2009	2009	1993	북한	1973년
길이(m) (길이×폭)	138×28	110×19	167×22.6	북한 (2012.5.)	248톤
선수량 (t)	18,800	7,480	21,280	대한 (2012.5.)	3,000톤급 전 (860억 원)
배수량 (톤)	250	85	-	주요 임무	남극 탐사 임무
시속/항속	1.8m/ 3kn 48일	1m/3kn 48일	1.8m/ 3kn 48일	남극 기지	소와를 4기 기지

14

4 정책 시사점

15

2. 9가지 북극 정책 제언(⑥~⑦)

▶ 북극해 항로 개설에 따른 물류변화에 대응

- 관계 법령 정비
- 국내 물류 인프라 장기 계획 수립, 북극해 항행 민간 선박회사에 대한 건조 자금 지원 등 국내 종합 대책 마련
- 해적 등이 발생할 경우 북극 항로를 대체항로로 이용하기 위한 선박의 장비와 선원 육성 시책 마련

▶ 북극해 항로 개설을 상정한 방위 정책 입안

- 새로운 북극 해상 교통로에 대한 방위 대책 수립
- 북극해부터 동아시아에 이르는 해역의 상선과 군함 운항 등을 파악하는 '해양정보종합통합망(Maritime Domain Awareness)'을 통한 감시활동 강화
- 북극해 군사작전 발생을 상정한 해상 자위대의 군사력과 임무 확대 검토

16

- 일본의 정책 형성 구조가 산·학·연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정책화 가능성 있음
- 이 보고서에 해양기본법 입법 목적이 언급된 것도 이전 두 차례의 과학조사 연구와는 달리 정책화가 가능한 근거
- 우리도 북극해 항로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를 대비한 안보대책, 극지 관련 국제협력, 과학 및 환경 협정 추진
- 한·중·일 3국의 공동으로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함께 취득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
- 북극 정책화 가능성에 대비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강구

17